

# 민주 광주시장 경선 이용섭-강기정 '리턴매치' 성사

### 이번주부터 경선 레이스 본격화 강, 출마선언·이, 다음주 후보 등록 현안, 국정과제 반영 놓고 신경전 정준호·장연주·김주업 등 도전장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가 본격화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번주부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내주께 출마선언을 한 뒤 시장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기로 하면서 재선 도전을 21일 공식화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과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어 고배를 마셨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도 지난 18일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로써 4년 만에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이용섭-강기정 '리턴매치'가 성사될 전망이다.

두 유력 주자의 등판으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전도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새 정부 국정 과제 반영 등 시급한 긴급현안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께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장 출마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광주의 핵심 사업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번 주부터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접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광주 상무지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캠프 구성에 착수했다.

강기정 전 수석은 2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공식 출마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 전 수석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만드는 '광주신경제지도' 정책과 더불어 복합소포몰 등 광역시에 걸맞은 생활인프라를 갖추는 방안 등도 함께 밝힐 계획이다.

광주시장 유력 주자인 이 시장과 강 전 수석의 신경전도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강 전 수석이 제안했던 '범정치세력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대립점이 있는 분들이 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 필요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에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계시는데 국민의힘과 정치의 장에서 논쟁하고, 대응하는 상황에서 전면에서 나서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행정에서 지역 주요 사업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선 각자 위치에서 필요할 때 도와주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범정치TF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 시장과 강 전 수석 이외에도 광주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정준호 변호사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한다.

지난 총선에 나온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도 민주당 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끝나고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에 맞서 정의당에서는 광주시의회 장영주 의원이, 진보당에서는 김주업 광주시장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도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광주시장 후보를 낼 계획이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당선인 경제6단체장 회동...규제 완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

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제단체장들은 민관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윤 당선인한테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격정스럽다. 국가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투자와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광주 국회의원들 '외부 공관위원장' 확정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1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확정했고, 광주지역 한 교수가 후보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은 서울에서 6·1 지방선거 준비 절차를 점검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안을 놓고 논의했었고, 이날 회동을 통해 '외부 공관위원장'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또 대학교수와 정당인 등이 후보군으로 추천됐

고, 논의 등을 통해 1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는 여성이 50% 이상 참여하고 당 외부 인사도 30% 이상 포함시키는 등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상무위원회를 통해 공관위원장을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지역 한 국회의원은 "광주에서부터 지방선거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첫 걸음인 공관위원장도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광주에 청년과 여성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폭이 대폭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무리"

### "인수위에 우려 전달할 것"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대해 '무리한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내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모양이어서 당장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더 미뤄지는 것은 물론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

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와대 측은 윤 당선인이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려 한 것에 대해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10일 취임식 이후, 용산의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과 윤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도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대선 이후 12일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10일 이내 이뤄졌던 기존의 회동 관행이 깨진 것은 물론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정권출범과 함께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의 흐름을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오히려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민심이 원활한 정권 이양을 바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022 WORLD WATER DAY  
세계 물의 날  
2022.03.22.(화)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통합 물관리  
하나 된 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